

정책 동향

POLICY TREND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기술자문사업 추진

산업자원부는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과대학 교수진과 연구소의 연구원 등 기술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산업기술자문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현직 공대교수 2,800여명이 참여하는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과 퇴직교수 및 연구원 등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의 전문인력을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1대1 기술자문 지원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애로기술 해소와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으로 '03년 10월 1차년도 사업을 시작, 그간 235개 기업에 대해 총 242건의 기술지도를 제공,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왔다.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o중소기업 각각에 대해 1명씩의 Mentor(기술후견인)을 연계,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수요를 포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1사1전담멘터지원 o기술아이디어나 애로기술 등을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해결하는 단기애로기술지원의 2가지 형태를 취하며 o건당 정부지원규모는 1사1전담멘토지원의 경우 5백~8백만원 이내(기업부담 25% 이상, 현금), 단기애로기술지원의 경우 2천만원 이내(기업부담 25% 이상) 금번 사업은 '03년에 이은 2차년도 사업으로 총 지원규모는 20억원이다.

산업자원부,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에너지산업부문 대응책 마련에 나서

산업자원부는 교토의정서가 내년초에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산업계 업종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말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부터 시작될 것으

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부처와 함께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내년초까지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통계 정비,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체계 마련 등 온

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중 산업자원부내에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만들어 운영하여, 그 안에 발전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계 민관합동 업종별대책반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업종별대책반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시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하여 발전·정유 등 8대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전문가·협회·주요기업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산업자원부 관련과장과 협회임원(상근 부회장)이 공동 반장을 맡아 운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2007까지 업종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정책자금 지원 시행

대·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동일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자금의 30%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지원하기로 하고, 산업기반자금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는 업체당 50억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하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은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며, 금리는 4.9~6% 수준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에는 기업은행도 적극 참

여하기로 하였으며, 협력사업이 대규모인 이유 등으로 정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업은행도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의 63.9%가 모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들로서,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은 대통령주재 확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향후 대·중소기업들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참여 늘어날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들의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